스쿨존 제한속도 낮춰 '제2 민식이' 막는다

광주·전남 경찰 40㎞ 허용 없애
경찰 추가배치·CCTV 설치 확대
신호등 없는 곳 반드시 일시정지

광주·전남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낮춘다.

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시간은 물론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광주지역 초등학교 앞 도로 중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은 43곳으로, 이중 10곳은 차로 등을 조정해 보도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도로 여건상 차로 조정이 어려운 33곳은 도로 확장 또는 일방통행 지정 등을 장기과제로 추진중이다. 광주경찰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선 담당 지역 경찰서장이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교직원·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로 하고 조만간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던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시속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은 다만 급 감속에 따른 사고위험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지만,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인 계도·단속에 나선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올리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 밖에도 통학버스 합동 점검도 정례화한다.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의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처벌 강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23 / 해짐 17:20 / 달뜸 12:04 / 달짐 22:34

초장군

낮부터 찬공기가 유입돼 추워지겠다

광 주	구름많음	4/8	보 성	구름많음	2/8
목 포	비온뒤갬	5/8	순 천	구름많음	5/9
여 수	구름많음	6/9	영 광	구름많고한때 비	4/7
나 주	구름많음	2/9	진 도	구름많음	6/9
완 도	구름많음	6/9	전 주	흐림	3/6
구 례	구름많음	3/8	군 산	비 또는 눈	3/7
강 진	구름많음	5/9	남 원	흐림	2/5
해 남	구름많음	5/9	흑산도	구름많고한때 비	7/9
장 성	구름많음	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	서~북서	1.0~2.5
	먼바다(서)	북서~북	2.0~3.0	서~북서	2.0~3.0
	먼바다(동)	북서~북	2.0~3.0	서~북서	2.0~3.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2.0	서~북서	1.0~2.0
	먼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먼바다(동)	북서~북	2.0~3.0	서~북서	2.0~3.0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증	보통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39	05:24
	23:39	18:15
여수	05:58	00:02
	19:11	12:51

◇주간 날씨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2/10	2/11	0/6	-3/6	-3/8	-1/9	0/11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부실조사"

특조위, 헌재에 의견서 제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고,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심의 당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5명이 정부의 공식 피해 인정을 받는 등 새로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실험 결과만을 기초로 심의를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는 심의 절차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케 하는 등 피심의인인 기업에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 사건처리"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5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가 그해 9월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헌재에서 이를 심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겨울 시작…한랭 질환 조심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주의보 발령

광주·전남지역에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찾아오면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한랭질환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곳곳에 2일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낮부터 겨울 추위를 알리는 찬공기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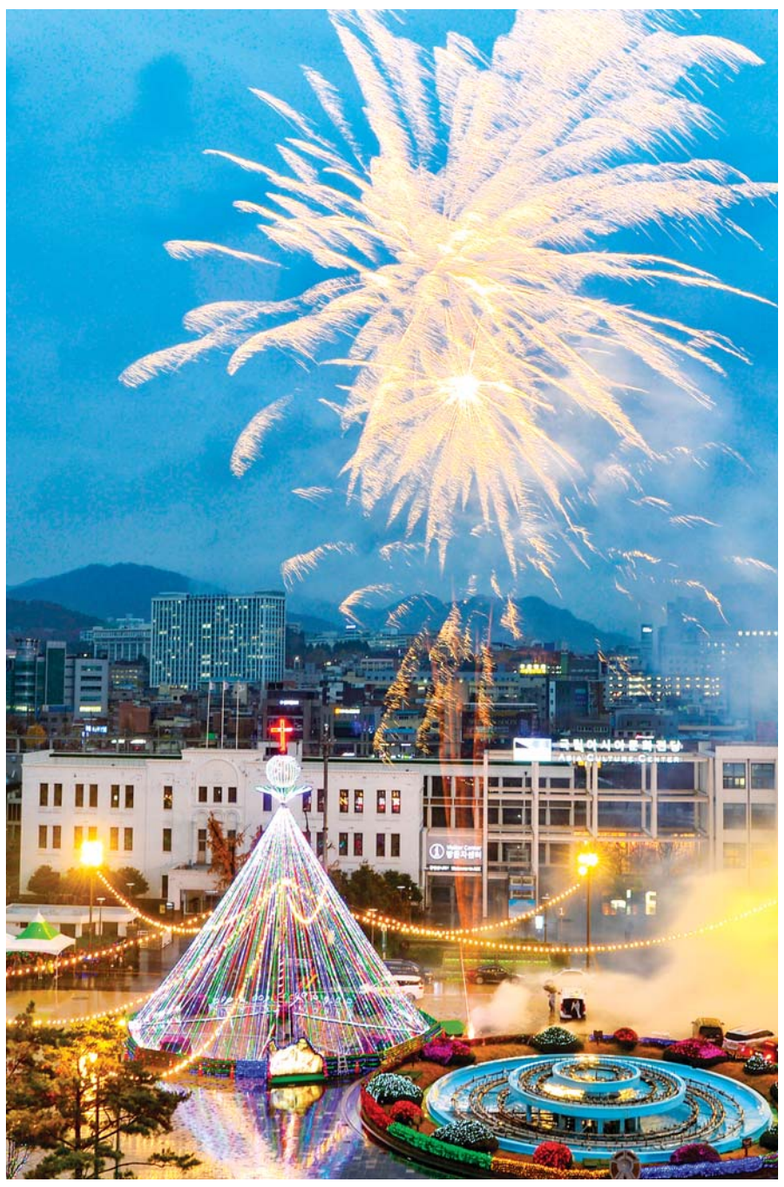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 주의보를 발령하고, 노약자 등을 중심으로 기습추위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돼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위험이 크므로 12월 첫 추위와 기습추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겨울철(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28일·전국 평균 기온은 1.3도)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접수된 한랭질환자 수는 404명이었으며, 이 중 10명이 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민주광장 불 밝힌 성탄트리 1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19 성탄트리' 점등식과 함께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광주시 북구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북구는 "2일 오후 1시부터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 어린이집 교직원 250여명이 참석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여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와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및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구조사가 강사로 참여해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 북구내 어린이집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한 표창과 격려도 이뤄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검 등 전국 65개 검찰청에 인권센터 설치

대검찰청이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있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없애고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이는 1일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에 따른 것이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2005년 7월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설치됐지만,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할 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광주고검 등 전국 고등검찰청, 지검·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돼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현황을 파악·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 지원 등을 한다. 인권센터는 사건 관계인들이 검찰 업무 종사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모든 민원을 통합해 관리한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침해 예방과 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